

“보험금 노리고”...여친 청부 살해 시도 ‘무서운 10대들’

심야 산속 이벤트로 속여 유인 흥기 휘둘러 ‘치밀 범행’ “외제차 할부금 목적” 진술...경찰, 10대 3명 구속 영장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유인한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10대로, 고교동창들이다. 특히 이들은 보험금을 목적으로 여자친구와 교제하고 살해까지 모의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꾸며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야산에서 흥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다치게 한 혐의(살인 미수)로 A(19)씨와 B(19)씨, C(19)씨등 3명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11시경 화순

군 북면 한 야산에서 여자친구 D씨를 흉기로 찌르고 신체 일부를 압박해 숨지게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자친구 D씨는 가까스로 이들에게서 벗어났으며 주변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의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고교 동창 사이로 D씨 명의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 설계사인 A씨는 지난 5월 채팅 앱을 통해 D씨를 만났다. 의도적으로 D

씨에게 접근한 A씨는 여자친구의 환심을 산 뒤 4억원에서 5억원의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지정하고 D씨 명의로 보험을 들었다. 보험에 가입한 뒤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안 A씨는 D씨와 관계를 유지했으며 5개월이 지난 뒤 범행에 나섰다. A씨와 D씨는 화순의 한 야산의 펜션으로 여행을 떠났으며 “산속에 선물을 숨겨 놓았다”고 속인 뒤 D씨 혼자 가게 했다. D씨는 밤길에 무서워 다시 펜션으로

돌아왔지만 A씨는 혼자 찾아야 한다며 다시 산속으로 D씨를 가게 했다. D씨는 가까스로 A씨가 이야기한 지점에 도착했지만 선물은 없었으며 친구와 짜고 기다리고 있던 B씨가 흥기를 휘둘렀다. 목 등을 다친 D씨는 도망쳤지만 이내 붙잡혀 B씨로부터 신체 압박을 당하기도 했다.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저항을 한 D씨는 또 도망갔고, 다행히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트렁크

등에 숨어있는 A씨와 B씨를 붙잡았다. 또 다른 차량을 이용해 이들의 도주를 도울 예정이었던 C씨도 검거했다. C씨는 순천에서 화순으로 이동하던 중 차량 바퀴에 이상이 생겨 범행 현장에 도착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외제차 할부금을 갖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고 있다./김동수·화순=이병철기자

‘붕괴 참사’ 재개발 비위 몸통 수사 본격화

경찰청, 조합·시공사·정비사업관리자 등 계약주체 혐의 규명 주력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재개발 비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브로커들에 대한 신병 처리를 마무리하고 비위의 몸통으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12일 마지막 브로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면,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을 비롯한 총 4명의 브로커를 송치하고 다음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향후 수사 대상은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관계자들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자(컨설팅·용역 업체 관계자) 등이다.

조합과 시공사는 철거 등 업체 선정 계약의 주체들이다. 브로커에게 금품을 제공한 하도급업체들이 실제 공사 업체로 선정돼 조합과 시공사의 개입도 의심되는 상황으로, 이들에 대한 혐의 규명 여부가 주목된다. 여기에 추가로 경찰은 시공사가 조합 등에 대여금을 지급한 과정에서도 불법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공사 관계자를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사업관리자들은 전문성이 없는 조합을 대신해 실제 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하는데 지원한 이들로 조합 관계자들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들로 5명을 구속하는 등 총 9명을 송치한 경찰은 추가로 재개발 비위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 재개발 비위 관련 현재까지 18명을 입건해 브로커 3명을 구속하고 브로커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시민단체들은 부실 수사 의혹과 함께 시공사의 개입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있어, 수사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신병 처리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등 점차 수사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아직 확인·수사해야 할 내용이 많이 남아 있어 수사력을 집중해 의혹이 남지 않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아이와 행복한 세상 만들어요” 혼자보다는 둘의 행복! '저출산 대응 청년광각토코소'가 지난 8일 광주 북구 꿈나무사회복지관에서 열렸다. 이날 청년과 신혼·육아부부 등 참석자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나에게 가족이란 의미를 담은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광주북구 제공)

광주·전남 디지털포렌식 분석 매년 급증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분석 건수가 광주·전남지역에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분석 수사기법의 역할도 커지고 있어 전문 인력 증원 등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

가 나온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전남지역 디지털포렌식 분석 건수가 2~3배 증가했다. 광주는 2017년 885건, 2018년 1천341

건, 2019년 2천232건, 2020년 2천111건, 2021년(8월까지) 1천687건으로, 전남은 같은 기간 1천216건, 1천646건, 1천823건, 2천220건, 1천830건에 달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3만4천541건, 2018년 4만3천531건, 2019년 5만5천194건, 2020년 6만3천34건으로 3년 새 2만8천493건(82.4%)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도 이미 5만161건을 기록해 예년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수기자

법원, 목포시 과태료 부과 관리업체 이의신청 인용

법원이 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관리업체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광주지법목포지원은 지난 1일 목포시의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관리업체의 이의신청을 인용·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목포시는 관리업체는 지난 2018년 3월1일부터 2019년 1월2

3일까지 목포 소재 모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면서 승강기보수공사(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6건의 시설물 공사를 실시하고 관리비 등을 집행했다. 목포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실시한 후 시설별도 이력관리를 하고 공동주택관

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년 7월14일 해당 관리업체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해당 업체는 위반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 위반행위 전후의 상황, 위반의 정도, 이의신청서의 내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해당 업체 측에 굳이 과태료에 처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이로 업체 측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목포=정혜선기자

광주법원 권위적 재판 실태 질타

법사위 국감서 부적절 언행 등 지적

지난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광주고법·지법 국정감사에서 법관(판사)들의 부적절 언행과 권위적인 재판 진행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017년 광주지법에서 재판장이 대학교수인 진정인을 일어나게 해 같은 대학 총장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자료와 탄원서들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여러 차례 “주제없는 짓을 했다”고 힐난한 사례를 언급했다. 소 의원은 “당시 인권위원회가 방청객 모욕 발언에 대한 시정 권고를 했지만 광주지법은 ‘불수용’ 입장을 냈다”며 “일반 국민들이 이걸 납득할 수 있을까. 법관의 법정언행은 ‘재판’ 범주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법정에서의 욕설도 재판 진행인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택시 기사 2명이 만취한 여성 승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사건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이 1심의 최고 징역 12년형을 파기하고 최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점도 국민법 감정과 양형 기준 사이에 괴리감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최강욱 의원은 “광주에서 총 4차례 하위 법관에 이름을 올리거나 2년 연속 선정된 인물도 있다”며 “비단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법관들은 승패가 있는 일이라 50%는 자신들을 비난하고 싫어하게 돼 있다고 자조적으로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법관들이 얼마나 당사자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배려하고 예의 있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신뢰도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주고등법원장은 “법원장들

이 법관 평가 결과를 다 받지만 일관된 반영 원칙이나 규칙은 없다”며 “저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사실상 다 반영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합리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과거에는 성폭력 사건에서 합의 시 선처를 많이 해 비난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갈수록 반영 비중이 작아지고 1심을 존중하는 추세”라며 “하지만 국민들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 숫자를 줄이고 국민들과의 의견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영구 광주지방법원장은 “법정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이 근절돼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며 “사건 관계자가 참여하는 무기명 설문 프로그램, 법정 촬영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재판장 중 6명은 법정 언행 컨설팅도 1대 1로 받고 있다. 법관 간담회 등에서 품격 있고 절제된 언행을 하도록 당부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TIME CITY
명품브랜드 시계 수리전문점
타임시티 (TIME CITY)

책임 A/S
명품 쿼츠 시계 수리전문
오토매틱 수리 전문
스위스, 독일 시계 수리장비 최다보유 (A/S센터와 동일장비 보유)

광주 광산구 첨단강변로 100 (쌍암동 695-1)

영업시간 평일 10:00 - 20:00 공휴일·토요일 10:00 - 18:00 일요일 휴무
문의 010-8475-5472 * 근무시간에만 통화가능

늦으시면 앓차하십니다

급매 전문

[상가건물]
○ 고창 공영면 (2차선 포장도로변) 법성포, 가마미해수욕장 근거리
대지3,707㎡ 가공공장,창고,판매장3개동
매가:6억8,000(시세50%)
***기든경합비집,농산물직판장,휴게소종합매장 최적

[화순군 화순읍 대리 동호인주택지]
○ 광주에서10분
○ 자연녹지 6,600㎡
○ 급매가:5억3,800만원(시세50%)
***동호인주택4-6동 개발 최적

급히 구합니다 --- 손님 다수 대기중입니다

○ 병원신축용땅 1,000㎡ 내외
○ 월세 및 투자용 상가 건물 10억~50억
***부동산 무엇보다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 유재관 010-6495-3787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